갈피 못잡는 석유화학 정책

최근 서울의 교통난이 한결 완화,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관공서를 비롯 정부의 각종 산하단체들이 실시하기 시작, 요즘 대기업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가용 10부제가 완전 정착되고, 약간씩의 불편을 참으면서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교통문화가 뿌리를 내린다면, 서울의 교통지옥은 자연 해소될 것이고, 쾌적까지는 어렵겠지만 정겨움이 넘치는 도시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교통문화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시민들의 무절제한 낭비 풍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원적으로는 10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부 교통정책의 「근시안」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즉, 70년대 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도로율을 따지고, 인구집중을 논하면서 인구집중방지책 및 도로확장, 시내버스 노선 개선, 택시의 횡포방지 등을 외쳤지만 교통행정가들의 머리에까지는 와닿지 못했다.
이들 몇몇 대안들은 발상은 좋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점, 정책집행의 어려움, 교통을 넘어선 정책적 결정의 필요성 등 결정·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책담당자들의 자세가 인구를 분산시켜야 하고 시민을 위한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심각성은 훨씬 덜 했을 터이고, 또 땅값 폭등까지 겹친 도로율 확보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입안·집행되고 있는 석유화학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적으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예측, 비젼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 전혀 그렇지 못한 감을 주고 있어 관계자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3월12일 발표된 상공부의 「석유화학산업 수급안정대책」을 보면, 정부 정책의 근시안성과 졸속, 억지춘향식 정책논리를 한 눈에 보는 것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대책안」의 요지를 보면, NCC(나프타 분해센터) 및 SM·카프로락탐사업은 95년까지 신규 투자를 불허하고, 합성고무 및 TPA는 93년 이후 투자허용 여부를 재검토하며, 합성수지 및 BTX는 원료 및 부산물 수급·처리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공급과잉이 심각, 가동률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폭락하는 품목은 신규 투자를 못하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며, 합성수지는 공급과잉은 심하나 에틸렌·프로필렌 수급차원에서 일부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공부의 대책은 균형과 형평성을 잃고 있음은 물론, 투자자유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번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삼성·현대의 증설 가능성을 전혀 논외로 할 수는 없겠지만 NCC에 돈을 쏟아부을 기업이 어디 있으며, SM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나설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또, 합성수지 및 BTX는 원료(부산물) 수급차원에서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합성고무는 비슷한 공급과잉, 아니 심하지 않은, 그것도 독점기업의 무분별한 증설에 기인된 과잉시설임에도 부타디엔 수급차원의 투자허용이 아닌 투자불허를 외치는 까닭은 무엇인가?
카프로락탐은 동양나이론·코오롱의 투자완료 후에도 공급이 부족하고, 이들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막겠다는 것은 억지이며, TPA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과잉, 가격폭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93년 이후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상공부의 대책은 대림·유공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또 삼성의 투자는 허용하고, 현대의 투자(카프로락탐·합성고무)는 제한하는 편파적 우를 범할 가능성 또한 엿보이고 있다.

물론, 상공부 및 관료기질의 내압과 경제기획원 · 동자부 등 경제부처 사이의 곤궁, 기업들의 불평불만, 높은 곳의 외압 등 상공부로서도 견디기 힘들었다는 점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일개 기업의 사업 투자여부 결정도 아닌 정부의 정책이 억지논리이어서는 안되며, 분홍빛 무지개 꿈은 아닐지라도 시궁창을 향한 첫걸음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는 점 분명할 것이다.
2000년을 바라보는, 공평무사한 정책의지가 한결 아쉬운 때이다.

<화학저널 1992/4/1>